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병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92
----------	------

발의연월일 : 2024. 6. 28.

발 의 자 : 이병진 · 조 국 · 송옥주
윤후덕 · 임호선 · 권철승
한정애 · 박지원 · 이상식
전현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비무장지대(DMZ: demilitarized zone)는 그 동안 냉전시대의 유산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남북의 대치로 인해 오히려 독특한 문화 및 자연 환경이 유지되고 있어 남북이 이를 평화적으로 이용한다면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고, 인류 공동의 소중한 자산으로도 이용할 수 있을 것임.

또한, 판문점선언에서 남북정상이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에 합의하였고, 이후 평양공동선언에서 구체적인 이행조치를 마련하였음에도 현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자연환경보전법」 등에서 비무장지대 내 행위제한과 관련하여 일부 내용만을 규율하고 있을 뿐임.

이에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비무장지대를 보전하고,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비무장지대의 생태적·문화적 가치를 보전하고 평화적 이용을 지원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통일부장관은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지원하고 그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8조).

다.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통일부에 비무장지대 평화이용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라. 정부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무장지대 평화이용지구를 지정하고 그 조성과 개발·운영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마. 정부는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민이 참여하는 사업을 개발·시행할 수 있음(안 제17조).

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고, 통일부장관은 비무장지대와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안 제18조 및 제19조).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비무장지대의 생태적·문화적 가치를 보전하고 평화적 이용을 지원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비무장지대에서의 평화와 남북공동번영의 추구
2. 접경지역의 발전과 남북 접경지역간 협력 도모
3. 비무장지대에서의 국민의 생명·안전 보장 및 편의 제공
4. 비무장지대에서의 자연환경 보전 및 문화재의 보존
5. 비무장지대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및 참여 증진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무장지대(DMZ: demilitarized zone)”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제1조에 따라 설치된 군사분계선을 기점으로 남북으로 각각 2km 이내로 설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접경지역”이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

역을 말한다.

3. “평화적이용사업”이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 단독, 남북 공동, 또는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비무장지대에서 추진하는 평화 증진, 남북협력 증진, 자연환경 보전, 문화재 보존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제4조(국가의 책무) ① 정부는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남북간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주변국 및 국제기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국민참여 사업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비무장지대(비무장지대와 접경 지역을 연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

② 다른 법률에서 비무장지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제2장 계획의 수립

제6조(종합계획) ① 통일부장관은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지원하고 그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의 목표에 관한 사항
2.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한 추진전략 및 주요 추진 과제에 관한 사항
3.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필요한 조직과 재원에 관한 사항
4.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관련 남북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관련 국제적 협력에 관한 사항
6.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관련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사항
7.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관련 국민들의 이해 및 참여 제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종합계획 수립·변경을 위한 관련 기초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관계 공공기관의 장

4.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교육·연구기관 및 관련 단체

④ 통일부장관은 종합계획안을 수립하여 제9조에 따른 비무장지대 평화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⑤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환경보전계획)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에 있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보전계획과의 연계를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통일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을 토대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을 제9조에 따른 비무장지대평화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계획의 조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위원회 설치 등

제9조(비무장지대평화이용위원회) ①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통일부에 비무장지대평화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관련 중요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확정·변경 및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
3.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관련 남북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관련 국제적 협력에 관한 사항
6.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관련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위촉위원은 10명 이내로 한다.

1. 당연직위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2. 위촉위원 :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

⑥ 위원회의 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비무장지대평화이용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비무장지대평화이용기획단) ①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 소속으로 비무장지대평화이용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통일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기획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

제11조(비무장지대 평화이용지구) ① 정부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무장지대 평화이용지구(이하 “지구”라 한다)를 구분하여 지정하고 그 조성과 개발·운영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지구를 지정·조성 및 운영함에 있어서 비무장지대의 환경 및 문화재 보전, 남북협력 증진, 국토의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남북간 및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지구 지정·조성 및 운영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실태조사) ① 정부는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하여 역사, 문화, 환경, 생태, 산림, 토지 이용 등에 관하여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

관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정부는 남북간 및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비무장지대 전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부는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전문 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의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문화유산 등의 국외 선양 지원) ① 정부는 비무장지대의 자연 생태환경 및 문화적·역사적 유산을 보존·관리하고 그 가치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남북간 및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비무장지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등 문화유산의 국외 선양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비무장지대의 문화유산 등의 국외 선양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비무장지대 지뢰제거를 위한 지원) ① 정부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비무장지대에서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하여 비무장지대 내 지뢰를 제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남북간 및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비무장지대에서 지뢰를 제거하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비무장지대 지뢰제거 사업 시행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안전 및 출입을 위한 지원) ① 정부는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비무장지대를 출입하거나 물품·장비의 반입·출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사분계선 이북의 비무장지대를 방문할 수 있도록 남북간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한 출입·통행에 필요한 도로, 철도, 통신 등의 기반 시설 구축을 계획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비무장지대를 출입하는 자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신변안전 확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북한주민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북한주민이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을 방문할 경우 북한주민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문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북한주민의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 방문에 필요한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국민 인식 제고와 참여) ① 정부는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의 필요성에 관한 국민의 관심 확대를 위하여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민이 참여하는 사업을 개발·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은 생태·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범위·종류 및 비용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 및 관계 시·도지사는 적절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 및 관계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통일부장관은 비무장지대와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재정지원) 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비무장지대의 보전 및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을 위하여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이용사업과 연계되어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재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추진기관의 지정) ① 통일부장관은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추진기관(이

하 “추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추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 대책의 수립·시행
2. 평화적이용사업 시행자에 대한 운영 지도 및 감독
3.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에 대한 학술·연구·출판 지원
4. 비무장지대에 대한 실태조사 지원
5.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
6.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관련 국내외 홍보 및 인식제고 사업 지원
7.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단체 활동 지원
8.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남북간 및 국제적 협력 지원
9.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진기관에 위탁하는 사업

③ 통일부장관은 추진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추진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사업의 시행 등

제22조(사업시행자) 평화적이용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

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정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6.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제23조(사업의 시행승인) ① 통일부장관(제22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은 평화적이용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사업의 시행을 승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하거나 제3항에 따라 사업의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그 사업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에 관한

사항 및 남북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를 제외하고 고시할 수 있다.

⑤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3호의 경우에는 사업의 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

1.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3.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시행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제22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사업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사업시행 신청 및 승인, 취소 및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① 국가는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지원하고 그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토지 등의 수용·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6장 벌칙 등

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비무장지대평화이용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추진기관은 이 법에 따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형법」 제127조와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6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제20조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군사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따른 업무 외의 목적에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